내달 북·미대화 겨냥한 한반도 긴장조성용

北 NLL 침범 의도와 남북관계 파장

통행차단 가능성…개성공단 또 '풍전등화'

북한 경비정이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오면서 발생한 남북간의 해상 교전이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은 북한이 이번에 NLL을 침범한 의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만약 고의로 NLL을 침범했다고 가정하면 이는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북미대화를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의제화할 목적으로 한반도 정전상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려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즉 이달 중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핵 6자회담 재가동만을 북미대화의 의제로 삼으려는 미국을 향해 '조선반도비핵화는 핵협상과 함께 한반도 정전체제의 틀을 깨는 노력이 병행돼야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 남북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군사적 도발을 수단으로 택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북기조를 바꾸기 위한 '강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쨌든 이번 사태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물밑 타진설이 부각된 이후 대화없이 소강상태를 보내고 있는 남북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일차적 관건은 북한의 후속 조치 유무다. 일단 북한이 이날 오후 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남측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후속 대응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북이 우리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기조를 바꾸고 남북대화를 조기화하기 위해서는 '긴장지수'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느낀 나머지 지난 3월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때 했던 것처럼 군통신선을 끊고 남북 통행을 차단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엔 아직 일러 보인다.

그럴 경우 우리 국민 1천명 안팎이 상주하는 개성공단은 또 한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 8월 이후 '관망기조' 속에 대북 접근을 서두르지 않았던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의 긴장국면 재조성으로 연결되길 바라지 않을 것이기에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추구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즉각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고 그에 따라 대북 접근을 서두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보다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북한이 8월 이후 전술적 변화를 했을 뿐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과 그에 따른 대북 '원칙 강조' 기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가능성을 점치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결국 이번 사태가 남북간 불신의 골을 좀 더 깊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남북간 소통채널이 원활히 작용할지 여부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의 크기를 결정할 또 하나의 변수로 거론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년 2~3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0일 "최소한 연말까지는 내년 지방선거 후보 선정 관련 당헌·당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민생제일녹색자치추진단(과거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뒤 광주일보 기자와 만나 "민심과 부합되는 후보를 선정하도록 경선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또 "정세균 대표가 선거 3개월 전에는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만큼 최소 내년 2~3월에는 경선이 모두 치러져야 한다"며 "호남지역에서 가장 먼저 후보를 내지는 않을 것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특히 "시·도·군민의 지지를 받아야 후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변화나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지난 총선 공천 때처럼 '호남지역 30% 교체' 등의 공천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세미나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10일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일선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호남권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공무원 인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시 산하기관 예산·인사 '멋대로'

행정사무감사 12건 적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들이 부적절하게 예산를 집행하고 인사를 단행했다가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10일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가 올해 광주발전연구원과 비엔날레, 광역정보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도시철도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을 적발해 3건은 징계 조치했고, 9건은 훈계·경고·주의 조치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 광주발전연구원은 일반회계 4천300만원과 지역인재육성사업 특별회계 7천800여만원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놓고도 결산서에 사용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회계 시책추진비 450만원을 전용해 직원채용 면접위원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광주비엔날레는 시 보조금 4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잔액 1억8천6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광역정보센터는 서류심사와 면접절차 없이 3명을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정욱기자 jwpark@

"신종플루보다 무서운 재정플루 온다"

김효석·이용섭의원 대정부질의 적자재정 비판

김효석의원

이용섭의원

국회의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출신의 정책통인 김효석, 이용섭 의원이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 호평을 받았다.

3선의 김 의원은 이날 우선 "현 정부 들어서 신종플루보다 더 무서운 재정플루가 번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부 재정적자가 200조원이 증가하고 이 가운데 약 80%가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이며 이는 1948년 정부수립부터 지난 2007년까지 누적된 적자성 채무보다 30조원이나 많은 액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소득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논란과 관련, 본회의장 대형화면에 박지성 선수와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사진과 함께 숫자(52대 35)를 보여주며 "박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뛸 때 52%를 소득세로 냈고, 우리 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이 전 회장은 35%를 냈다. 이승엽 선수도 일본에서 40%, 박찬호 선수도 미국에서 내년부터 39.6%를 소득세로 낸다"고 설명한 뒤 "우리 나라는 부자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에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최고의 정책통으로 평가받는 이 의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 내년도 정부 발표 국가채무는 407조(GDP의 36.9%)이나, 공공 부문 부채 포함시 최소 850조(GDP 대비 77%)를 웃돌 것"이라며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임기 내 재정위기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농협 조합장 선거 '틀' 바꿔야

최경호 사회부 기자

"농협 선거요? 돈으로 표를 사는 선거지요."

최근 만난 A씨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조합장에 출마했던 '악몽'을 애써 떠올리기 조차 싫은 표정이었다.

그는 올 하반기 전남지역 모 농협 선거에 나섰다가 '돈 선거'의 실상을 뼈저리게 느꼈다. '선거 직전 수억원대의 뭉칫돈을 풀었다'고 소문이 난 상대 후보가 몰표를 얻었기 때문이다. 농협 간부 출신이라는 '메리트'도 '돈 봉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상대 후보가 돈을 쓴다는 말에 아랑곳 않고 당당하게 선거를 치렀는데, 결과는 참담했다"며 "돈을 쓰지않고는 결코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광주·전남지역 농·수·축협의 조합장 선거가 '부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당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합장 선거가 금품살포와 음식물 제공 등 각종 불·탈법 행위로 얼룩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에서 치러진 조합장 선거 76곳 중 28곳에서 무려 40건의 불·탈법 행위가 적발됐다. 선거구 3곳 중 1곳 꼴로 부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또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을 넘는 21건을 차지해 '돈 선거'를 실태를 보여줬다.

광주지검도 올 들어 8월까지 농협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4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제공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 12명, 후보자 매수 4명 등으로 대부분 선거과정에서 '뒷돈'을 주고 받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당시 7명을 구속기소하며 불법 선거에 대한 엄단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일에도 '돈 선거' 의혹이 제기된 모 농협 조합장 후보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선거의 '악령'이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가 '복마전'의 멍에를 벗기 위해선 선거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한적인 선거방식이 되레 불·탈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돈 선거'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의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돈을 쓰고 당선된 조합장은 '본전'을 찾기 위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게 되고, 이는 조합의 부실 운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농협의 경우 4년새 3차례나 선거를 치르는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선거 때 돈을 받았다면, 봉투를 그대로 들고 수사기관으로 가야하는 이유다.

일각에선 조합장 선거에 대해 깨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으로 표현한다. 이미 '갈데까지 간' 선거 풍토를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선거의 '틀'을 뜯어고쳐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른 때'가 아니겠는가. /choice@kwangju.co.kr